지표로 보는 이슈
제90호 | 2017년 5월 23일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이내영
www.nars.go.kr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며, 2075년에는 80.1명에 이르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는 현행 노후생활보장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데, 세계노인복지지표 96개국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34.8%에 이르는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위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근로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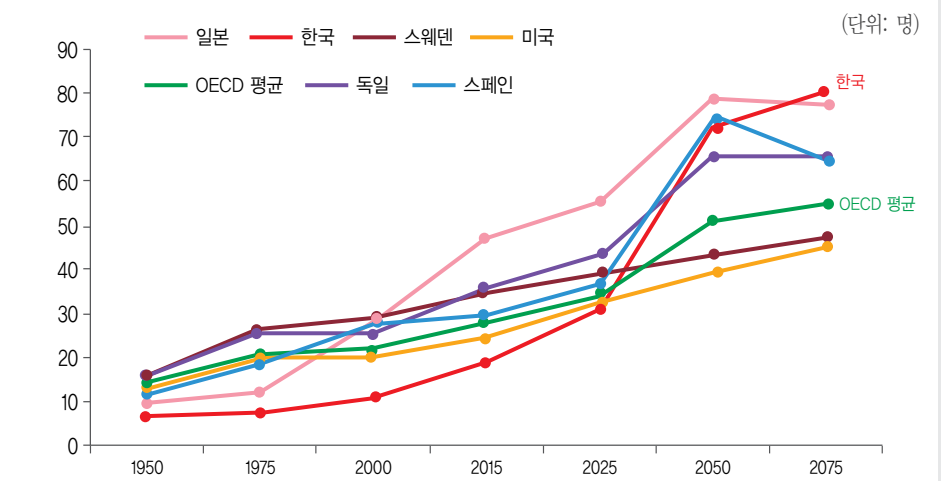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사회학박사)
02-788-4720, manwooisj@assembly.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274-1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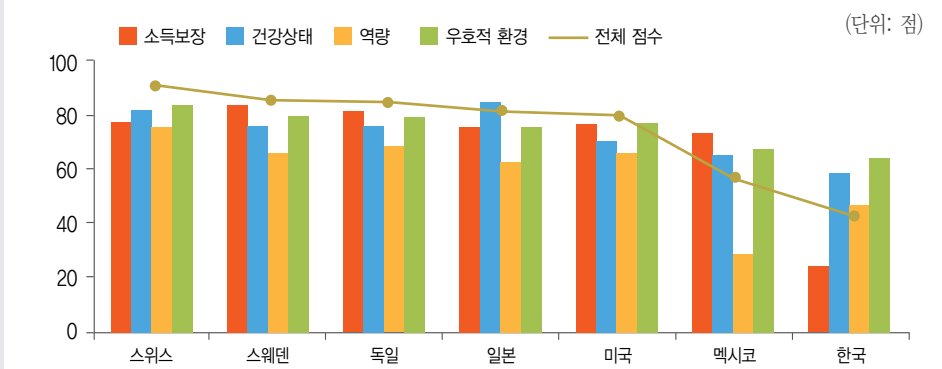


구분	1950	1975	2000	2015	2025	2050	2075
일본	10.0	13.0	27.6	47.2	55.4	78.4	77.2
한국	6.3	7.5	11.5	19.6	31.1	71.5	80.1
스웨덴	16.8	26.2	29.5	34.8	39.0	42.7	46.5
미국	14.3	19.1	20.9	24.7	33.1	39.5	45.0
독일	16.0	26.3	26.2	35.3	43.7	65.1	66.3
스페인	12.8	19.2	27.3	29.6	36.3	73.2	65.4
OECD 평균	13.7	19.4	22.5	27.6	34.6	51.0	55.4

주: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함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and G20 Indicators*, 2015.

세계노인복지지표 (96개국 비교, 2015년 기준)



구분	스위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멕시코	한국
종합 순위	1	3	4	8	9	33	60
소득보장	77.3 (27)	83.5 (7)	80.9 (15)	75.1 (33)	76.3 (29)	73.4 (36)	24.7 (82)
건강상태	81.3 (2)	75.2 (12)	75.6 (11)	83.9 (1)	70.1 (25)	64.5 (35)	58.2 (42)
역량	75.0 (2)	65.6 (5)	68.4 (3)	62.7 (7)	65.7 (4)	28.7 (62)	47.8 (26)
우호적 환경	83.7 (1)	79.4 (6)	78.6 (11)	75.5 (21)	76.8 (17)	66.7 (46)	64.1 (54)
전체 점수	90.1	84.4	84.3	80.8	79.3	56.3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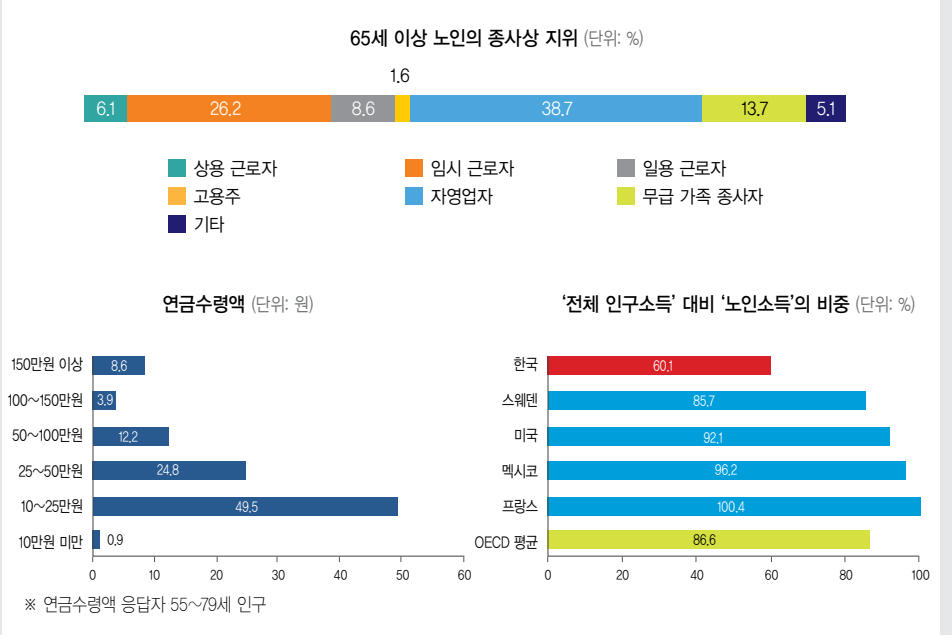
주: 세계노인복지지표는 다음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 ) 수는 해당 영역의 순위임. 소득보장(Income Security; 연금 소득보장 등), 건강상태(Health Status; 60세 건강수명 등), 역량(Capability; 고용률 등),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 사회연결망, 신체 안전 등)

자료: HelpAge International, *Global AgeWatch Index*, 2015.

-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임
  -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과 스웨덴(34.8명)은 높은 편이며, 스페인(29.6명)과 미국(24.7명)이 중간(OECD 평균, 27.6명)이고, 한국은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에 이어 네 번째로 젊은 국가임
- 기대수명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한국은 2075년 80.1명에 이르러, 일본(77.2명)을 추월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향후 노인 부양부담이 급속하게 증가된다는 것으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의 방향 정립을 위해 노인복지의 현 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세계 96개국 비교 결과, 한국은 전체 점수 44.0점으로 멕시코(56.3점, 33위)보다 낮은 종합 순위 60위를 차지하고 있음
  - 스위스가 90.1점으로 1위이며, 스웨덴(3위), 독일(4위)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뒤따르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도 각각 8위와 9위임
- 한국은 '소득보장' 영역에서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하며, 이는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냄
  - 반면, '역량' 영역은 비교적 양호하여 47.8점으로 26위이며, 이는 한국의 높은 노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한국 노인의 고용 및 소득 실태 (2010, 2016년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2016;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5.

-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수준은 열악하여, 상용근로자는 6.1%에 불과함
  - 임시근로자 26.2%, 무급가족종사자 13.7%, 일용근로자가 8.6%에 이르고, '생계유지형' 자영업자도 38.7%에 달함
-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여 월 10~25만 원 정도 받는 노인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절반(49.5%)에 이름
  -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 미만(0.9%)도 있음
  - 이러한 노인소득보장의 미흡함은 전체 인구소득 대비 노인소득의 비중이 한국은 60.1%로서 OECD 평균(86.6%)보다 26.5%p나 낮은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시사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는 현행 노후생활보장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노인복지지표의 96개 국가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소득보장 영역에서 노인빈곤 대응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위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따라서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근로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함
  -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의 준공적 연금이라는 공적 노인부양체계와 개인연금 및 부모·자녀 동거를 통한 사적 노인부양체계를 통합하여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통합·강화**)
  -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채용장려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고령자 채용 성과보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지위를 드높이는 고용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Active aging' **제고**)

※ **핀란드 고령근로자를 위한 국가프로그램**(Finnish National Programme on Aging Workers: FINPAW, 1998~2002): 고령근로자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으로서 주요 목적은 고령근로자 개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 취업을 촉진하는 '인적자본 투자형' 혹은 '공급지향형' 접근을 취하고 있음. 특히 '고령자 노동능력의 유지 및 향상(Maintenance of work ability: MWA)'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핵심임

관련 통계 사이트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Global AgeWatch Index(http://www.helpage.org),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tat.go.kr)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우)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788-4510(代)
ISSN 2383-563X